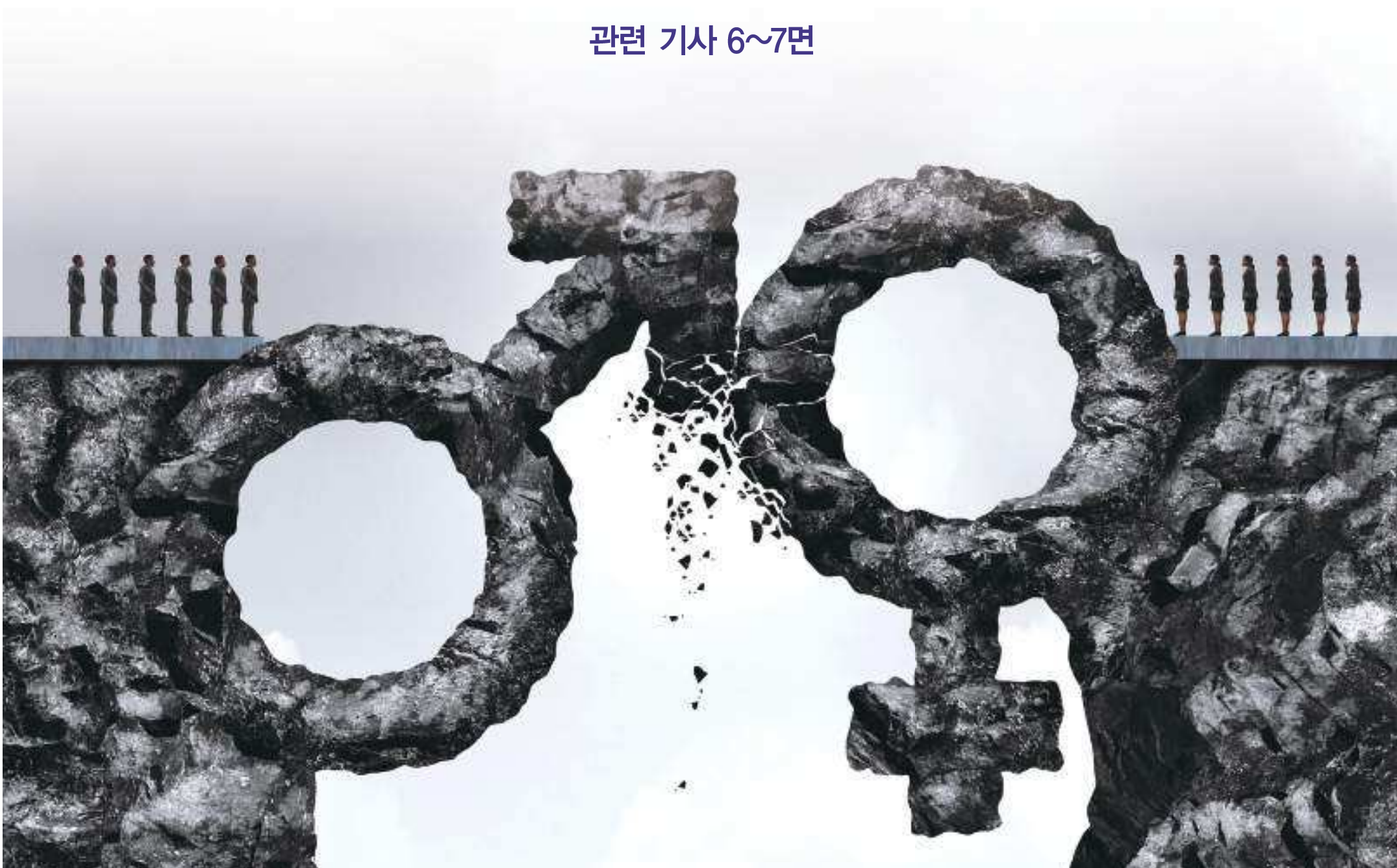


청년층 불만을 젠더 갈등으로 호도하지 말라

관련 기사 6~7면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3면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6~7면

주요 대선 후보들
부동산 공약 비교

12면

정여당의 책임 연정과
제3지대 공조 제안

5면

알렉스 칼리니코프 논평

갈수록 첨예해지는
러시아와 서방의 힘겨루기

4면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8~9면

국제

미국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살해범 무죄 판결

10면

수단 쿠데타 반대 저항

4면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새우깍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임준형

화성의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새우깍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M씨는 여전히 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법무부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M씨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해제(조건부 일시 석방), 책임자 처벌,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6일에 발표한 권고문에서 M씨의 석방을 권고하지 않았다. 책임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한 것만 빼면,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무부 편을 든 셈이다.

반발

11월 18일 대책위는 ‘외국인보호소 인가 강제수용소인가 ‘새우깍기’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열었다. 마지막까지 M씨가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끝내 보호소를 나오지 못했다.

대신 카슈미르 출신 난민 인정자 사다르 씨가 증언에 나섰다. 그는



사진 출처: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최소 20분 최대 3시간 난민 신청자 M씨가 여러 차례 새우깍기 고문을 당하며 견뎌야 했던 시간

2013년 1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다. 무려 57일간 단식투쟁을 한 끝에 2014년에 석방돼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사다르 씨는 보호소에서 언제 석방될지 알 수 없는 점이 굉장히 답답했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지르면 정해진 형량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유인이 됩니다. 하지만 보호소 구금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최악입니다.”

보호소 측은 구금된 이주민들을 범죄자처럼 감시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정도 외부 운동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운동 시간

이 아닙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 방에 숨기는 게 없는지 수색하는 시간입니다.”

법무부는 구금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은 인정했지만, 수갑과 포승줄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독방에 M씨를 구금한 것은 “과격한 행동, 기물 파손,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다르 씨는 설사 이런 행동이 있었어도 그것은 비인간적인 처우와 모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정당한 항의라는 점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음식을 배분하는데 [보호소 직원]이 식판을 막 던졌습니다. 국이며 밥

이며 식판 전체에 흘렸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던져 주는 개는 아니잖아요. [이에 항의하자] 저를 독방에 넣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11일 동안 단식해서 인터넷 접속과 변호인에게 팩스 전송 등을 90일 안에 개선해 주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호소 측은 90일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한 달 안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려고 나니 한 달이 지나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동안 참아야 하나요? 방

법이 없어요.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응하고 반격해야 합니다.”

국경 통제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구금된 이주민 수 축소, 적법절차 강화, 보호소 내 이동 보장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M씨조차 석방하지 않는 마당에 얼마나 실질적일 개선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일손 부족 등의 필요로 이주민을 들이면서도, 체류 자격 부여·박탈을 무기로 이주민에게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거나 복지 혜택 등에서 배제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부분 제외 등이 그런 생생한 사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혼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해서 반강제로 남편에게 매여 있게끔 한다.

가난과 박해, 전쟁 등의 위험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국에 온 난민을 들이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오히려 도로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런 야만적인 국경 통제와 인종차별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적 국가기관이다. 구금된 이주민의 고통을 일부 완화하려면 절차적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보호소의 본질적 기능에 비춰 보면 그것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문 피해자는 즉시 석방돼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보호소는 폐쇄돼야 하고, 이주민의 자유 왕래가 보장돼야 한다.

수소 에너지는 기후 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강동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기후 위기 대안으로 수소 에너지를 강조해 왔다.

임기 초에는 수소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개발·보급을 강조하더니, 최근에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문재인은 “한국이 특히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소 활용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수소 에너지 개발을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들도 수소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전경연연구원 조사를 보면,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30여 나라에서 ‘수소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2030년까지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총 3000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한다.

수소 지지자들은 수소가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한다. 수소는 세상에 널리 있어 고갈 우려가 없고, 사용

할 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소를 생산하는 데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된다. 자연 상태에서 수소는 수소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 생산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소를 생산하는 데 막대한 온실가스가 나오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오늘날 전 세계 수소 생산량 7000만 톤 가운데 76퍼센트를 천연가스에서 추출하고(그레이 수소), 나머지 23퍼센트를 석탄에서 추출한다(브라운 수소).

그레이 수소 1톤을 생산하는 데에 이산화탄소 11톤이 배출되고, 브라운 수소는 이보다도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2018년 기준 연간 8억 3000만 톤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영국과 인도네시아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다.

그린 워싱

물을 전기분해 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도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한다면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게 된다.

물론 태양광과 풍력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이 없다(그린 수소).

문재인 정부도 그린 수소가 아닌 수소 생산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하는 ‘그린 워싱’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그린 수소 생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린 수소뿐 아니라 ‘블루 수소’ 생산도 확대하려고 한다.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방식이다. 그러나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이 전제돼야 하고 이 기술을 적용해도 탄소를 완전

히 제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그린 수소가 기후 위기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물을 전기분해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려 40~50퍼센트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송을 위해 수소를 액화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려 해도 수소 폭발에 안전한 수송선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에너지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뿐 아니라 주요국 정부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수소에 대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수소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것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한국 정부는 석탄·천연가스 발전에 수소·암모니아를 섞

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투자된 화석연료 설비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SK·GS 같은 거대 석유·가스 기업들이 기후 위기에 대처한다면서 블루 수소 투자에 열을 올리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수소 개발에 치중하는 것은 핵발전을 옹호하는 주장으로도 연결되기 쉽다. 핵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그린 수소 생산을 늘리는 게 대안이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핵발전은 방사능 누출 위험은 차치하더라도, 모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수소 경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게 시급하다.

그러려면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에서 이윤을 얻으려 하는 정부·대기업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김영익

11월 23일 전두환(1931~2021)이 사망했다. 한국 현대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명을 남긴 학살자가 드디어 죽은 것이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성장한 군인이었다. 그는 육군 대위 시절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조직해 종로를 관통하는 쿠데타 지지 행진을 벌여, 박정희의 눈에 들었다. 그 후 전두환은 군 내 주요 보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가히 박정희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할 만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었을 때, 전두환은 군부 내 핵심인 보안사령관이었다. 박정희가 살해되면서 생긴 권력 공백은 그의 총복이었던 전두환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그는 박정희 살해 사건 수사를 맡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됐고, 신속하게 경찰·검찰과 중앙정보부까지 장악했다. 10·26 직후 이미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전두환 계엄사령부 수사본부장, 한국의 실권을 잡다"라고 했다.

당시 대통령 최규하와 계엄사령관 정승화는 유신 독재에 대한 대중의 열등과 반발을 의식해 긴급조치 9호 해제 등 약간의 유화 조치를 폈다.

그러나 전두환과 신군부는 '박정희 없는 유신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노태우 등과 함께 군대를 동원해, 자신의 상급자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했다. 이것이 12·12 쿠데타다.

이로써 전두환이 군부 내 주도권을 쥐게 됐고, 이 신군부가 권력의 새로운 중심이 됐다.

“박정희보다 더 지독한 놈”

이제 신군부는 유신 정권의 억압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대중의 반발을 놀려야 했다. 박정희 사망 이후 그동안 숨죽이던 학생운동이 부활하고 있었다. 노동자들도 억눌린 불만을 터뜨려,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면적 탄압을 시작했다. 이날 하루에만 재야인사, 학생운동 활동가, 언론인 등 600명 이상이 체포됐다.

광주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저항이 터져 나왔다.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



전두환은 광주를 짓밟아서 권력을 잡았지만, 광주의 진실을 알고 각성한 대중의 저항으로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입돼 시위를 잔인하게 탄압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였고, 이에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시위는 거대한 무장 항쟁으로 번졌다.

전두환은 광주를 총칼로 짓밟았다. 헬기 기관총 소사까지 이뤄진 진압과 학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저항과 학살은 한 세대의 청년들을 통째로 급진화시켰고, 전두환에 맞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을 다짐하게 만들었다.

노동자들도 전두환의 폭압을 피하지 못했다. 전두환은 '노동조합 평화지침'을 실시하고, 민주노조들을 파괴했다. 많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해고되거나 체포됐고,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신군부는 노동법을 개악해,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독소 조항을 넣어 노동운동을 억눌렀다.

전태일의 어머니이자 노동운동 활동가였던 고(故) 이소선 씨는 이때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 독재가 죽어서 민주주의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더 지독한 놈이 나타났다.”

이처럼 전두환은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하고 총칼로 대중을 억누르고 대통령이 됐다.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은 전두환 정권에서 요직을 독차지하며 권력을 누렸다.

박종철

전두환 정권하에서 경제 성장이 잘 이뤄진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자들도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같은 자들. 이들은 김재익 같은 자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등용해 호황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호황은 세계적인 저물가·저유가·저금리에 연동돼 가능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미국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세계은행의 공공차관, 일본의 막대한 구제금융도 받을 수 있었다.

경제 상황은 나아지고 기업들이 엄청난 이윤을 축적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 상승은 억제됐고, 전두환의 억측한 탄압이 강압적인 군대식 노동 규율의 유지를 뒷받침했다.

반면 권력자들의 축재와 비리가 만

연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 같은 권력형 부패 사건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장영자 사건이 민주정의당(전두환의 당) 정치자금과 전두환 일가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검찰 발표를 비웃었다.

전두환과 그 일가는 권력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축재를 저질렀다. 일해재단은 비자금 창구가 됐다. 훗날 밝혀진 바로 전두환 자신이 9000억 원 넘는 돈을 비자금으로 챙겼다.

폭압과 부정부패는 결국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혔다. 1985년 대우차 파업과 구로동맹 파업 등 탄압을 뚫고 솟한 투쟁이 벌어졌다.

전두환은 탄압 강화로 이를 억누르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 살해 사건 같은 야만적 국가범죄들이 벌어졌다.

29만 원

그러나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밀려 전두환은 장기집권을 포기하고 뒷걸음치는 양보를 해야 했다. 거리에서 전투성을 발휘했던 노동자들은 군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면서 작

업장 민주주의로 눈을 돌렸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부터 대략 2년여 더 노동자 투쟁의 고조기가 이어지면서 군부는 다시 돌아올 꿈을 포기했다.

투쟁에 밀려 전두환은 1988년 백담사로 정치적 유배를 가야 했다. 그럼에도 학살자를 처벌하라는 항의는 이어졌다. 결국 1995년 쿠데타 처벌 공소시효를 앞두고 대학생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터져 나왔다.

법 해석이 바뀌었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했다. 그러나 김영삼과 김대중에 의해 1997년 말 대선(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직후 사면됐다.

사면된 후 죽을 때까지 전두환은 자신의 잘못을 단 한 번도 뉘우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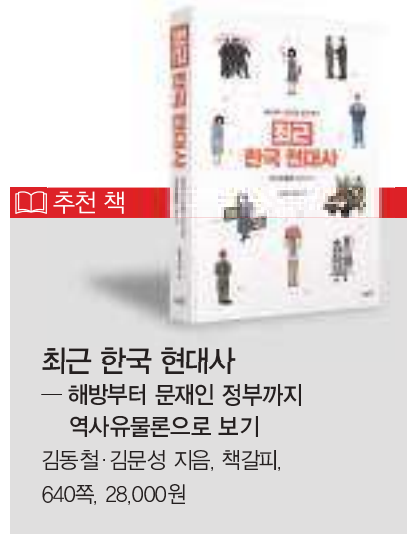
이 자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 했으나, 제대로 내지도 않고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텼다. 그의 자식들은 지금도 고가의 부동산과 여러 알짜배기 기업들을 갖고 있다.

5·18 광주 항쟁에 대해서도 일절 반성이 없다. 2003년 KBS 인터뷰에서 전두환은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학살을 정당화했다.

회고록에서는 광주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했다. 이 때문에 전두환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두환은 잔악한 독재자이자 학살자였으며,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죽었다.

그러나 그는 대중 항쟁으로 권좌에서 쫓겨나야 했던 자다. 그의 친구 노태우와 더불어 역사의 단죄를 결코 피할 수 없다.



최근 한국 현대사
—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김동철·김문성 지음, 책갈피,
640쪽, 28,000원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교 | ☐ 기타)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5만 원 | ☐ 기타 () 원(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동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첨예해지는 러시아와 서방의 힘겨루기

강대국 간 충돌, 심지어는 강대국 간 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두 지역이 있다. 하나는 동·남중국해다. 그곳에서는 중국이 여기저기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접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접경지다.

둘 중 더 위험한 쪽은 아마 동·남중국해일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먼저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은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접경지이다. 거기서는 두 나라가 충돌의 고리가 되고 있다. 바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이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혁명 전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으며 1991년 옛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야 러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두 나라는 문화적·정치적·경제적으로 러시아와 유사하고 밀접하면서도 긴장 속에 있는 복잡한 관계를 러시아와 맺고 있다. 두 나라는 1991년 이후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그러다가 벨라루스는 러시아 쪽으로, 우크라이나는 서방 쪽으로 더 가까워졌다. 독립 이후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2020년 부정 선거로 다시 당선하고 저항을 분쇄한 뒤부터 러시아 독재자 푸틴의 지원에 기대어 왔다.

지난 몇 주 동안 벨라루스와 유럽연합의 대치가 고조돼 왔다. 필시 푸틴의 부추김을 받은 루카셴코가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폴란드 국경으로 몰아냈기 때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장 킬릴로 부다노프가 전쟁을 경고했다. 러시아 정부가 새해가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를 북쪽과 동쪽, 남쪽에서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친러]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반정부 시위에 밀려 탄핵당하자, 푸틴은 러시아 군대를 보내어 크림반도를 점령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후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강도로 대리전을 벌여 왔다. 푸틴의 군대와 정보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 있는 친러 세력을 무장시키고 훈련시켰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는 러시아군 9만 2000명이 집결해 있다. 푸틴이 그 병력을 실제로 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불리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마지막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 나토(NATO)와 유럽연합을 러시아의 국경으로 확장한 것이다. 안보 분석가인 조지 프리드먼은 2014년에 이렇게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에 가장 가까운 곳은 모스크바에서 약 380킬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미터 떨어져 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한때 소련의 한복판에 있던 도시 스몰렌스크는 국경 도시가 되고 만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광활한 영토로 스스로를 방어해 왔다. … 서방과의 완충 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은 그 광활함을 잠식당하고 유럽과 미국의 의도와 능력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을 뜻한다.”

현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연합과 나토에 기꺼이 가입하려 한다. 이것은 푸틴이 절대 넘지 말라고 경고한 기준선이다.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소리 높여 경고하는 것은 더 많은 지원을 달라고 미국과 유럽연합을 압박하려는 의도일지도 모른다. 부다노프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지원해 줘야 한다. 지금이 때다. 이때를 놓치면 뒤늦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미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여기에 응해 해군 함정 10척과 미사일을 제공해 준다는 협정을 이번 달에 체결했다.

푸틴도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병력을 집결시켰다가 철수시켰다.

서방도 러시아의 군사력을 재고 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인 흑해에서 그러고 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유 하나는 세바스토폴의 해군 기지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영국의 최신 항공모함 퀴엘리자베스함의 항모타격단에 속한 디펜더함은 지난 6월 흑해에서 러시아를 도발하는 항행을 벌였다. 푸틴은 최근 나토가 흑해에서 벌인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모든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우위를 점하기 위한 책략들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중국에 집중하려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진정시키려 한다. 바이든은 중국이 미국 패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옳게 본다. 미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잇달아 고위급 회담을 했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힘겨루기는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모두의 통제를 벗어나 본격적인 충돌로 커질지도 모른다.

번역 이원웅



"협상도, 연정도, 정당성도 없다" 군부에 맞선 거리와 작업장에서의 투쟁이 심화돼야 한다

수단

군부와의 협상은 혁명을 끝내려는 술책이다

찰리 킴버

군사 쿠데타에 맞선 수단인들의 반란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11월 20일 늦은 시각, 움마당의 파드랄라 부르마 나시르는 10월 25일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장군들이 물러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축출된 총리 압달라 함독을 군부가 이제 복권시킬 태세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함독이 총리직으로 돌아오면 “기술 관료들로 구성된 독립 내각을 구성하고 모든 정치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군부 측에서 어떤 양보의 꾀새를 보인 것은 전적으로 거의 한 달 동안 거리와 작업장에서 악랄한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대찬 저항이 벌어진 덕분이다.

그러나 움마당과 같은 자본가 정당과 군부 간의 협상은 혁명을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만 끝내려는 술책이다. 항쟁 진행 내 모든 선진 부위들은 군대와의 “협상 반대”를 외쳤다.

군부가 10월에 민정 이양을 저지한 것은 그들의 부와 권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군부는 2019년에 시위대에게 저지른 범죄와 수년간 다르푸르에서 자행한 학살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결코로는 민간에 권력을 이양하는 모습을 취하더라도] 배후에서 정부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군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시위와 파업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위를 올려야 한다.

압텔 파타흐 알부르한 장군과 살인자 무함마드 함단 다갈로(일명 “헤멧티”) 등 쿠데타 세력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시위대의 죽음과 고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군부의 모든 부를 빼앗아 수단의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

람들에게 나눠 줄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군부를 정부에서 영구히 배제할 것인가?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 쿠데타 반대 활동가들은 11월 21일 일요일에 대규모 시위를 열기로 계획했다.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최소 40명으로 늘었다는 한 의사 단체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잡힌 집회였다.

11월 17일 시위에서는 탄압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그날 하루에만 사망자 수가 16명에 달했다.

군부는 지역별 저항위원회의 중심지인 [수도] 하르툼의 바흐리 지구에서 11명을 살해했다. 그 지구의 저항위원회 위원 마압 살라흐는 이렇게 말했다. “바흐리의 거의 모든 동네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목격한 일들은 이전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각종 부대에서 온 군경이 모두 진압과 살해에 가담했습니다. 심지어 교통경찰이 시위대에게 발포하는 것도 봤습니다.”

쿠데타에 맞서는 ‘자유와 변화를 위한 연합’(FFC)은 현 군부 통치자들이 “옛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한다. 알바시르는 2019년 4월에 쫓겨났다. ‘자유와 변화를 위한 연합’은 수단의 새 군정에는 “협상도, 연정도, 정당성도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혁명의 물결과 커져 가는 대중 저항은 군부의 지배를 완전히 타도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100만 시위

11월 20일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11월 21일에 수백만 명 규모의 행진”을 벌이자고 했다.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호소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군부는 계속해서 시위대를 살상할 것이다.

군대와 경찰은 활동가들이 바리케이드를 다시 짓지 못하도록 하르툼 곳곳을 상시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 운동이 취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조처가 있다. 첫째, 총파업을 호소하고 조직해서 경제를 마비시키고, 군부 지배 체제의 기반이 협상을 들춰내야 한다.

둘째, 군사 정부에 맞서 지역 저항위원회와 노동자 조직을 기반으로 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 5면으로 이어짐



“되돌릴 수 없다!” 11월 21일, 군부에 맞서 계속 싸우자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정의당의 책임 연정 제안과 제3지대 공조 제안

김문성

최근 정의당이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제안하고 나섰다. 11월 2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김동연에게 조건 없는 회동을 제안했다.

“34년 양당 체제의 최종 결론은 내로 남볼 정치 ... 시민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두 당 중에서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측은 연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 제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애초 심상정 후보는 10월 11일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민주당에 책임 연정을 제안했다. 그러다 11월 들어서는 제3지대 연대를 말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정의당 주요 인사들로부터 나왔다. 박원석 전 사무총장은 경희대 안병진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11월 16일, ‘양당 체제 붕괴의 서막이 열린다’)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흥미진진하다고 논평했다. 안교수의 칼럼은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심상정-안철수-김동연의 제3지대 연대를 주장한다.

정의당 좌파로 알려져 있는 장석준 출판&연구 집단 산현재 기획위원회도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프레시안> 11월 16일, ‘대선 승자는 이미 결정됐다... 단, 이재명도 윤석열도 아니다’ “양당 정치에 대한 모든 도전은 정당하다 ... ‘제3지대’ 후보 혹은 후보들이 양대 정당 독점 정치 타파를 보다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완주한다면, 그것 자체로 대선 이후에 제6공화국 정치에 계속 강력히 도전할 힘이 될 수 있다.”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정치가 문제의 일부인 것도 맞고, 민주당이 개혁 세력이 아니라는 주장도 맞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를 자아내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배신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 탄소 중립 약속도 저버렸다. 청년들이 미래를 빼앗겼다고 느낄 만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이재명은 박근혜 퇴진을 일찌감치 지지해 촛불 대중 운동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일약 전국적 수준에서 개혁파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떠올라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자리에까지 올랐다.



우파가 결집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우파 못지않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참을성 있게 폭넓고 개방적인 대중 운동의 기초를 놓으려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가 된 지금 이재명은 개혁 배신 정부의 일원으로 비치는 데다 스스로 주류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유세에서 한 지지자가 이재명에게 “이재명 뽑아 놔더니 요즘 이낙연이야” 하고 쓴소리를 했다.

그래서 정의당이 문재인·민주당의 개혁 배신이나, 벌써부터 몇몇 개혁들에서 후퇴하는 발언을 하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도 옳고 필요하다. 특히, 문재인인의 개혁 배신과 이재명의 모순된 같짓자 행보에서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 정의당의 책임 연정론을 비판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를 보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과 수단**이다.

진정한 차별화

안철수는 올해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오세훈과 단일화했다.

김동연은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재정 지출에 부정적이고 공무원 감축, 노동조합 규제 등을 말하는 고위 경제관료 출신이다.

물론 정의당은 제3지대 공조론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제안은 아니라고 한

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정의당의 공조 대상이라는 공식 언급(그것도 심상정 후보의 공식 제안)만으로도 안철수·김동연 측에 유리하고 정의당과 좌파에게 불리하다.

특히, 안철수가 심상정과 공조로 중도 이미지를 조금 보태 준다면, 그것은 결국 우파 좋은 일만 시켜 주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정의당 간부들과 심상정 후보가 “제3지대” 연대를 말하며 안철수·김동연 같은 인물들과 공조하려는 것이 어느 모로보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1년여 정의당이 시도해 온 민주당과의 좌파적 차별화에도 어긋나고, 지지층의 정치적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는 진정으로 필요한 폭넓고 급진적인 대중 운동 건설에 기여할 수가 없다. 지금 정의당이 민주당·이재명과 차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변화의 동력인 폭넓은 대중 행동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나 노동조건 후퇴 등에 맞서는 대중 운동을 고무하고 그런 운동에 지지·연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우파가 윤석열 지지로 집결한 것은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당도 국민의힘 못지않게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서 그친다면 오히려 정치적 기회주의에 가깝다. 국제적으로도 좌파가 ‘좌와 우를 넘어서자’고 말할 때는 언제나 그것은 중도로 향하는 것의 표현이었다(블레어, 슈뢰더 등).

이런 일은 조급증의 발로다. 그런데 바로 그 조급증 때문에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당내 좌파들마저) 무원칙하게 대응했다가 지금의 낭패를 겪는 것 아닌가.

투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찬양·고무돼야 하는 것은 지금 대중의 사기가 우파가 집권해도 맞서 싸우면 된다는 수준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좌파는 폭넓고 개방적인 대중 운동 건설의 기초를 놓으려 해야 한다.

사실 정의당 간부들은 선거제 개혁과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기만과 사기를 당했다는 분노가 큰 듯하다. 또,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자이므로 그가 우파를 위한 권력을 탈환해도 ‘촛불 이전으로의 회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어(이명박과 박근혜

해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 심지어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이 유행했었다),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더라도 정의당이 행길 건 행겨야 한다고 전망하는 듯도 하다.

안철수나 김동연 같은 자들도 양당 정치 거부, 제3지대 운운하는 것은 “양당 체제 반대”라는 슬로건만으로는 별 좌파적 차별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시기 경험을 보면, 개혁의 의미가 모호해진 시기에 대선을 앞두고 주류 양당 바깥에서 잠깐 돌풍을 일으킨 인물들은 대부분 우파 인사들이었다. 김종필, 정주영, 박찬종, 정몽준, 이회창(2007년) 등.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이 유일하게 주류 양당 왼쪽에서 비교적 의미있는 도전을 제기했다. 나머지 사례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그 선거들은 선거 전에 커다란 대중 운동(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에 항의하는 운동,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이 분출해 정치적 지형이 다소 왼쪽으로 이동해, 좌파 정당이 대중의 가시적 선택지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참을성 있게 이런 ‘모델’을 추구하는 것의 일부가 돼야 한다.

▶ 4면에서 이어짐

이것은 “타협”을 통한 사태 해결을 원하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의 심기를 거스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길 유일한 길이다.

수단 활동가들은 각지에서 운동의 진로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11월 20일 영국 런던에서는 300여 명이 주영 수단 대사관 앞에 모여 쿠데

타에 항의했다. 시위대는 대사관에서 BBC 본사로 행진해 저항 세력의 목소리를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시위 참가자인 무사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간 통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폭력 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략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다른 시위 참가자인 샷다는 이렇게 말했다. “군부는 돈과 무기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장성들을 제거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제 사회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들을 막

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이다. 수단 혁명은 남다른 용기와 도전 정신을 보여 줬지만 이제는 더 발전된 형태의 저항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려면 군부와 타협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자들과의 전투가 필요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박이랑

[역자 주]

이 기사가 <소셜리스트 워커>에 보도된 이후 함독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쿠데타를 이끈 장성들과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수단직능인협회(SPA)를 비롯한 ‘자유와 변화를 위한 연합’, 지역별 저항위원회 등은 합의안을 거부하고 군부의 완전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정진희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여러 정치인들과 언론을 통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다루며 저마다 ‘해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언론이 말하는 ‘젠더 갈등’은 흔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으로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성별 격차를 곧 젠더 갈등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의 투표 차이를 우파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해석했다. 20대 남성 다수가 우파인 오세훈에게 표를 던지고, 20대 여성 사이에서는 오세훈보다 민주당 박영선에게 표를 던진 수가 약간 더 많았는데, 이를 ‘안티 페미니즘 대 친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청년층 남성들이 문재인에게 분노한 핵심적인 이유가 그의 개혁 배신이 아니라 페미니즘 때문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었다. 청년층 남성 중에는 페미니즘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도, 청년의 다수가 안티 페미니즘인 것은 아니다. 여성 차별의 현실 자체를 부정하며 여성 차별을 변호하는 안티 페미니즘은 청년 남성 중 소수에 불과하다.

‘시민의식 조사자료’(한국민주주의연구소·한국리서치) 등을 토대로 한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최종숙, 2020년) 논문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성평등 인식은 3040세대 남성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20대 남녀의 성평등 인식 격차도 다른 세대 남녀에 비해 크다고 하긴 어렵다.”

왜곡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등 우파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보수 세력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젠더 갈등 프레임을 이용해 왔다. 젠더 갈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친페미니즘 정책으로 돌리며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여경 무용론 등을 주장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도 당 경선 과정에서 그런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주장은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무시하고, 청년 남성의 삶도 악화된 이유를 호도하며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택난, 빈곤 등 청년 대중이 크게 고통받는 문제는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주무부처라는 위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때문에 생겨나거나 악화된 게 아니다.

성폭력 무고가 많다는 주장도 과장이다. 국내외 연구를 보면, 성폭력 무고는 드물다. 현재 무고죄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도 없다.(물론 여성의

무고 문제가 아예 없는 양 말하는 일부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오류이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젠더 갈등 프레임을 사용하는 쪽이 우파만은 아니다. 2019년 초에 젠더 갈등의 심각성을 부각한 쪽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쪽이었다. 2018년 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20대 지지율이 하락하자 문재인 정부는 그 이유를 젠더 갈등 탓으로 돌렸다.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정부 보고서는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부상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여성 정책’을 시행하면서 20대 남성은 역차별과 박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 직전에 정부와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20대 남성의 낮은 의식 탓으로 돌렸었다. 이 보고서에서도 20대 남성은 “사회적 배려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대]” 하고 매도한다.(관련 기사: <노동자 연대> 278호,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뻔뻔한 책임 전가이자 성별 이간질이었다. 정부 초기에는 20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정부 지지율이 매우 높았지만, 기대가 차츰 무너지며 환멸과 분노로 바뀌었다. 20대의 정부 지지율은 격차가 있어도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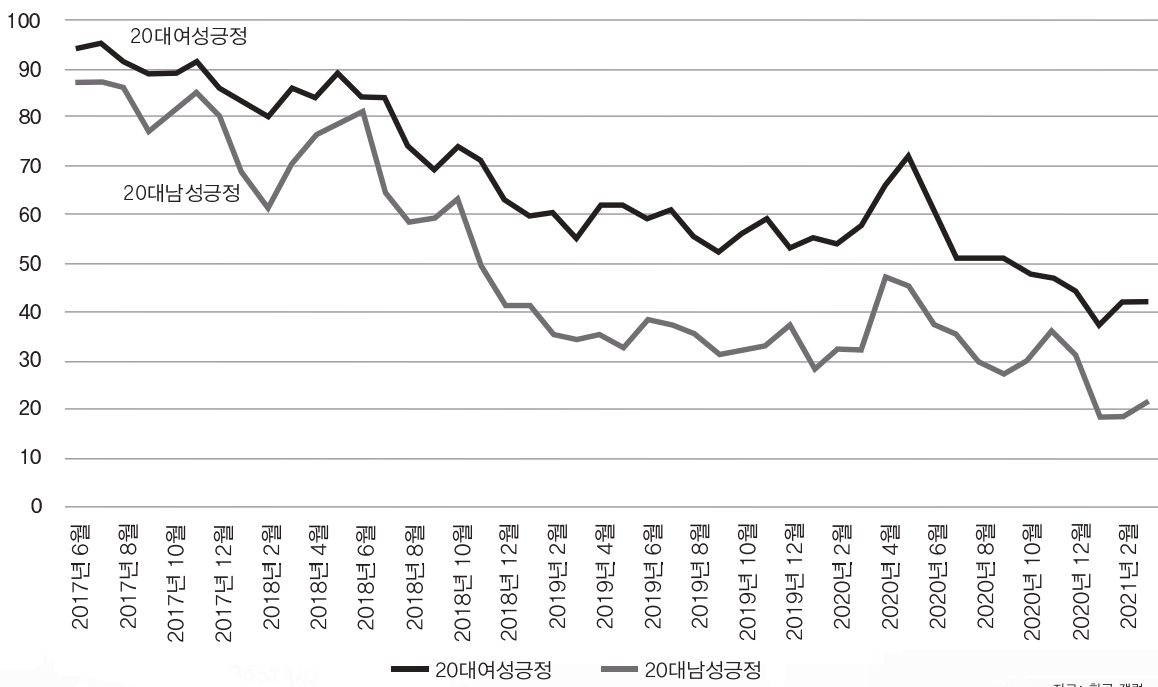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은 실질적 개혁은 거의 없는 생색내기에 가까웠다. 그래서 청년층 여성을 포함해 많은 여성이 불만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에 진출한 극소수 페미니스트들은 큰 혜택을 봤지만,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이 남성 역차별론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

물론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을 말했지만 정작 여성의 처지는 개선하지도 않았고, 보통의 애민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나 취급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에 대한 정당한 불만이 있다. 이런 불만을 경청하려는 자세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불만을 성평등을 위한 사상과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 또는 성평등 정책 탓으로 돌리는 주장에 이재명이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성과 남성을 이간질하는 논리를 강화할 뿐이다. 평범한 남녀 청년들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더 과감한 대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남녀 문재인 직무수행평가 추이



자료: 한국 갤럽



20대 남성과 여성의 문재인 정부 지지도는 동반 하락 추세였다. 대다수 청년은 취업난 등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젠더 갈등의 근원

정치인과 언론들이 사태의 본질을 종종 ‘젠더 갈등’으로 호도하지만, 젠더 갈등이 실제로는 없고 모두 허구적 담론인 것은 아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단일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은 아니다. 그러므로 남성 일반과 여성 일반이 대립하며 갈등한다는 의미에서 ‘젠더 갈등’은 엄청난 과장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일부 개인들 사이의 갈등은 존재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은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현격히 높다. 여기에는 언론이 최근 몇 년 새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를 많이 다룬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 오늘날 청년층에서 불평등과 차별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여겨지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젠더 하나인 것은 아니다. 젠더 차별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즉 계급 관계 속에서 작용한다.

자본주의는 노동과 인간의 소외를 낳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 경쟁 원리는 교육, 노동시장 등 자본주의 시

스템 곳곳에서 작용한다. 일자리와 지위 등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사람들을 원자화시키며 불안과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성, 인종, 성지향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은 대중의 무력감과 좌절의 근원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있는 양 호도한다.

오늘날 여성 차별의 근원은 자본주의 가족제도의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기능에서 비롯한다. 가족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저렴하게 재생산하고, 성별 고정관념의 물질적 토대가 된다. 국가기관, 기업, 대중매체 등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제도가 가족제도의 이런 구실을 지탱하며 여성 차별을 유지·강화한다.

경쟁적이고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들이자 수호자들이 지배계급이 젠더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짓과 위선에 불과하다. 그들은 빈곤과 소외, 차별을 낳는 체제를 지탱하면서 저항을 이간시키려고 젠더 간 반목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정

치·사회적 위기가 심화된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윤을 보호하고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고자 노동계급의 조건을 악화시킨다. 이를 위해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자 성, 성적 지향, 인종 등의 차이를 부각시켜 이간질을 하며 갈등을 부추긴다.

노동계급의 조건이 나빠지면 노동자 등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조건 악화로 노동계급 내에서 성별 갈등이 증가하는 게 예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이 없어서 노동계급의 자신감이 약화되거나, 남녀 노동자들이 여성 차별에 맞서지 않는다면, 그런 갈등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조건 악화나 여성 차별에 맞서 단결해 싸운다면, 노동계급 내에서 성별 갈등은 약화될 수 있다. 여기서 지배계급의 이간질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단결이 얼마나 크고 효과적인지가 중요하다.

차별은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그들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단결하고 투쟁할 능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단결과 연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급진 페미니즘과 좌파의 약점

젠더 갈등의 주된 책임은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들이자 수호자들인 지배계급에 있다. 하지만 여성 차별에 맞서는 운동 세력이 그 표적을 잘못 맞추면 여성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운동을 건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데 일조하기 쉽다.

여성단체들과 젊은 여성 활동가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큰 급진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권력 관계로 규정하며 암묵적·명시적으로 남성 일반을 잠재적 가해자, 여성 일반을 피해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모든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인 양 주장하고, 남성 개인들과 여성 개인들 사이의 갈등을 모두 ‘여성 혐오’로 치부하며 남성을 도매금으로 매도해 왔다. 이런 주장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와 그 뒤 몇 년 간 〈한겨레〉와 〈경향신문〉 같은 진보주의 언론을 통해 사회 전체에 널리 확산됐다.

급진 페미니즘이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이자 여성 차별에서 득을 보는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다수 평범한 남성들은 반발하기 쉽다.

2018년 젠더 갈등을 촉발한 사례로 꼽히는 ‘이수역 폭행 사건’이 한 예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근처의 한 술집에서 여성 둘과 남성 셋 사이에 시비가 붙어 일어난 폭행 사건이었다.

개인들 사이의 다툼이 사회적 쟁점이 된 것은 여성 측의 주장이 온라인 게시판과 여러 언론의 보도로 급속히 퍼졌기 때문이다. 여성 측은 자신이 ‘머리가 짧고 화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매갈X라는 말을 듣고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 여성을 폭행한 남성들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30만여 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은 여성 측의 주장과는 상당히 달랐다. 해당 여성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게 아니고, 여성이 먼저 욕설을 하며 신체 접촉을 해서 싸움을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과 남성 측 모두 재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남성 1명이 모욕 및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여성 1명은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이 사건이 유발됐다는 점을 고려해 남성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언론들의 선정성과 함께, 성별 이분법적 페미니즘의 약점



청년층의 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 집회에 참가한 청년 노동자들

도 드러났다. 여러 유명 페미니스트들이 해당 여성 측의 주장을 진실로 단정하며 이 사건을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젠더 갈등을 주제로 다룬 여러 토론회에 페미니즘 측 패널로 나간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도 한 사례다. 당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던 신지예 씨는 이수역 사건을 ‘여성 혐오’ 사건이고 한국이 ‘여성 혐오 사회’라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자 연대〉는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예단하며 ‘여혐’, ‘남혐’으로 규정하는 주장과 그런 구도로 몰아가는 언론들의 선정적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낸 바 있다(〈노동자 연대〉 267호, ‘이수역 주점 사건’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

남성 개인(들)과 여성 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때, 진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건인데도 무조건 여성 편을 들며 남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페미니즘 내에 여전히 많다.

이런 성별 이분법과 도덕주의는 매우 위험하다. 해당 여성의 말이 허위이거나 과장이라면 억울한 피해가 생기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다. 또, 페미니즘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며 페미니즘에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이를 이용하기가 쉬워진다(이준석, 하태경 등등).

도덕주의

남성 일반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등 급진 페미니즘 일각의 과도한 주장과 실전은 평범한 청년 남성 상당수의 반발을 낳았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이 날

은 환멸과 결합돼 우파에게 득이 되어 왔다.

여성 차별을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및 작동 방식과 분리시키고 남성 일반을 여성 차별의 원인으로 보는 급진 페미니즘은 차별에 반대해 흔히 도덕주의적 대응을 한다. 남성 일반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한편, 여성에게는 무조건적인 도덕적 권위를 부여한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의 주장과 실전을 비판하면, 그것의 근본 문제의식을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백래시(안티 페미니즘)으로 몰아세운다. 이런 태도는 운동의 발전에 꼭 필요한 토론과 논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편, 중간계급 지향적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성평등을 추구하며 기층 남녀 대중의 투쟁을 건설하는 일에는 대개 무관심하다. 대신 국가기구를 활용하는 상층에서의 개혁을 추구한다. 이런 개혁주의 전략에 따라 많은 여성운동 지도자들은 민주당과 협조해 국가기구와 의회로 진출해 왔다.

성별 이분법적 노선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한 국가기구와 기업의 요직, 또 노동조합 기구에 여성 몫을 늘리는 데는 유용하다. 그러나 사회의 상층부에 여성의 진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대다수 보통 여성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제 잘 알려져 있다. 김대중 정부 이래 국가기구에 진출한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에 타협하면서, 더 온건해지며 평범한 여성들의 기대를 배신해 왔다.

주요 여성단체의 지도자들은 운동의 목표를 국가기구(공직) 진출에 두면서 여성운동을 노동운동이나 기층

사회운동과 분리시키며 여성운동을 협소하고 온건한 방식으로 이끌어 왔다.

문제는 좌파들(온건파, 급진파 모두)도 급진 페미니즘의 개념들을 대폭 수용하며 주류 여성운동을 추수하고, 노동운동에 분열을 야기하는 분열주의를 추수하거나 추동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좌파들은 성 관련 분쟁을 이용해 경쟁 좌파나 자신이 싫어하는 인물에게 ‘성폭력 가해’ 낙인을 찍으며 배척하고 연대 파괴에 골몰한다.

이런 분열주의는 가뜰이나 분열된 좌파를 더욱 분열하게 만들어 노동운동을 약화시킨다. 성평등을 전진시킬 수 있는 단결된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 대중의 환멸이 커졌지만, 정부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확대되며 전진하지 못한 결과, 세력 균형이 좌파에게 불리해졌다. 노동운동의 주요 지도부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상당 기간 동안 삼가며 급진적인 대중 투쟁 건설을 회피한 것과 좌파들의 분열주의가 모두 좌파의 열세에 일조했다.

진정한 해결책

젠더 갈등을 해소하려면, 평범한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키는 자본주의와 이를 지키려는 지배계급의 시도들에 맞서야 한다.

노동계급을 성별로 갈라놓는 주장을 반박하며 폭넓고 비종파적 방식으로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 투쟁하면서 얻는 자신감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상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여성 차별에도 효과적으로 맞서야 한다. 성폭력 중심으로 활동하며 남성 개개인을 규탄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초점이 되는 경향은 극복돼야 한다. 투쟁의 초점을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지배계급 권력에 맞추는 것이 운동의 방향이 돼야 한다.

여성 해방 투쟁은 여성만의 투쟁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가하는 대중 운동이 돼야 한다.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은 계급투쟁과 별개가 아니어야 하고, 계급투쟁과 통합적으로 연결될 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 백래시에 맞설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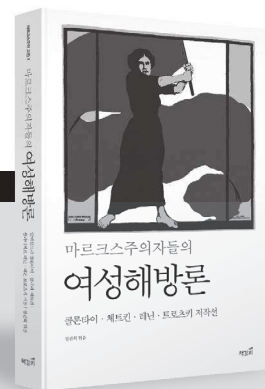
여성 해방은 착취받고 천대받는 모든 사람들의 해방과 분리될 수 없고,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를 제거하는 운동의 일부가 돼야 한다.

추천 책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클라라 체트킨, 블라디미르 레닌, 레온 트로츠키 지음
정진희 엮음, 책갈피, 272쪽, 13,000원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주디 콕스

코로나 팬데믹이 신자유주의의 관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는가?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떠받치려고 수십억 달러를 썼고, 막대한 조치와 공중 보건 대응을 조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출된 돈은 엄청나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조 및 경제안정법’을 제정해 5000억 달러(600조 원) 넘게 지원했는데, 이 돈은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들에 돌아갔다. 바이든은 미국의 모든 가구마다 1400달러(167만 원)를 지급했지만, 이는 바이든이 미국 재계에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제공한 1조 9000억 달러(2280조 원)에 견주면 새발의 피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이제까지 미국 경제에 도합 5조 달러(6000조 원)를 투입했다.

영국에서는 고용 유지 지원금에 대한 보도가 요란했지만,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과 비교하면 쥐꼬리만 한 금액이다. 영국 정부는 재앙적이었던 코로나 검사와 확진자 동선 파악 시스템 운영비로 서코그룹에 370억 파운드(60조 원) 넘게 지원했다. 지난해 서코그룹의 최고위 경영진 두 명은 급여와 보너스로 740만 파운드(120억 원)를 챙겼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의 한 가지 특징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막대한 지출을 들먹인다는 것이다.

체제를 긴급 구제하기?

하지만 정부의 정책들은 서로 모순된다.

자유시장[신자유주의]을 옹호하던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한편으로는 증세에 합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했다. 그리고 팬데믹 내내 대부분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고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방지하면서도, 자국민들에게는 가혹한 통제를 강요하려고 국가의 힘을 동원했다.

그 결과는 3중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민간 기업으로 흘러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으며, 국민 국가들은 더 강력한 권력으로 국민 전체를 억누르게 됐다.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가 표방하는 낮은 세율 및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듯이 보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각국 정부들이 1980년대에 채택했는데,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사상과 그들이 주도한 ‘몽펠랭협회’가 당시에 주목을 받았다. [영국 보수당] 마거릿 대처와 [미국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았다면, 신자유주의를 확립한 것은 [미국 민주당]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였다.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은 계기는 미국



각국 정부는 여전히 기업주들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에 매달리고 있다

의 항공 관제사 파업 패배와, 영국에서는 금속 노동자 파업, 인쇄 노동자 파업, 무엇보다도 광원 파업의 패배였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의 경제·정치·산업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가차없는 대응책이었다.

당시에 신자유주의의 핵심 사상은, 자원을 분배하는 최선의 수단은 시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자유무역, 국가보조금 폐지, 공공자산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쉬운[영국의] 사례를 들면, 한때 요양원은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지방정부가 운영했다. 1987년에 NHS는 노인 및 급성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18만 1000개 보유하고 있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민영화 끝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요양원은 전체의 3퍼센트에 불과하고, 민간 기업·자선단체가 요양원 병상 전체의 84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요양원 산업 규모는 159억 파운드(26조 원)다. 오늘날 사모펀드 기업들이 병상 약 5만 개

를 소유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기업들이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계획으로 주된 손해자가 될 것이다.

좌파 경제학자 그레이스 블레이크리는 지난 50년 사이에 “국정 운영 기조가 ‘시장에 대한 거버넌스’에서 ‘시장에 의한 거버넌스’로 바뀌었다”고 했다. 신자유주의의 부상은 금융 자본의 부상, 민영화와 세계화, 노동운동 탄압, 외채 구조조정으로 개발도상국 단속하기 등으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 “너무 과도”했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들은 “부의 창조자들”을 세금 같은 불필요한 규제에서 풀어 주는 데 의존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같은 부류가 신자유주의 세계를 주름잡는다.

[미국 의료기업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도 한때 그런 부류의 하나였다. 홈스의 회사가 손쉬운 혈액 검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녀는 세계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가 됐다. 홈스는 언론의 찬양을 받았

고, 루퍼트 머독과 헨리 키신저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서 투자를 유치했으며, 빌 클린턴과 조 바이든의 찬사를 받았다. 홈스는 현재 사기죄로 장기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홈스가 공인한 의료 기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듯 체제에 도박이 만연해 있었고 이는 2008년 경제 위기 때 가시화됐다. 2008년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정당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힌 일련의 주요 사건 중 최초였다.

2008년 금융 붕괴 때문에 은행이 부분적으로 국유화됐다. 이익은 사유화됐지만, 손실은 사회화됐다. 정부들은 ‘대마불사’ 은행들을 지원했고, 그 비용을 노동계급에 떠넘기려고 긴축 정책을 폈다. 이는 선진국 전역에서 신자유주의 공세가 재개되는 신호탄이었다.

2016년 신자유주의는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신자유주의 질서의 핵심 기관들과 다수 대기업들의 반대에도 실시됐다. 같은 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트럼프는 신자유주의를 떠받치는 국제 기구들에서 발을 뺐고 관세를 이용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였다.

두 사건을 보며 IMF 소속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가 “과도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는 각국 중앙은행이 2008년 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막대한 규모로 개입했다. 이런 극적인 태도 변화가 잘 드러난 사례로, 소위 좌파로 분류되는 멕시코 정부한테 재정 적자폭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IMF가 꾸짖는 것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개입은 신자유주의 교리에 따라 부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도록 이뤄졌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새로운 억만장자 500명이 탄생했다.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낳은 결과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금융 위기가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경제 질서에 맞선 저항과 우익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맞선 고무적인 반란이 칠레에서 레바논까지, 다시 미국까지 휩쓰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급진 우파 세력이 두드러지게 부상하는 것도 목격했는데, 유럽의 극우부터, 트럼프 뒤에 모인 위험한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정치 지형에서 중국의 부상은 하나의 상수였다. 중국은 국가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바이든은 자신의 1조 2000억 달러(144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연관지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경제적 경쟁과, 남중국해에서 점증하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드디어 사라지는 신자유주의?

몇몇 논평가들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을 보며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봤다. 세드릭 뒤랑은 최근 《뉴 레프트 리뷰》에 쓴 글에서, 2021년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1979년을 뒤집어 놓은 해로 봐야 할 만큼 지금의 팬데믹 대응은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는 확실히 정당성을 잃었다. 시장만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거



2008년 금융 붕괴 후 정부가 개입했지만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팬데믹 위기 이후 정부의 권위주의적 개입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상층의 부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나 국가 간 또는 일국에서 두드러지게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논평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은, 뒤랑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칼같은 반전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절정일 때조차 국민 국가들은 항상 자본의 이익을 위해 통치했다. 성향을 막론하고 각국 정부들은 체제를 안정시키고 자본주의가 번성할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해 왔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에 내재한 모순이다. 자유시장에서 자본이 번성할 최상의 조건을 보장하려면 때때로 국가는 에너지·철도·금융·통신 등 경제에 필수적인 산업을 도맡아야 한다고 본다. OECD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2011년 기준 세계 최대 기업 2000개 중 10퍼센트가 국가 소유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그 비율은 두 배로 증가해 20퍼센트가 됐다. 오늘날 전 세계 국유 기업의 규모는 45조 달러(5경 4000조 원)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각종 국가들이 차지한다. ‘자유시장’이 번창하려면 국가가 개입해서 그럴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수치들은 국가와 자본 사이의 관계가 구조적 상호의존임을 보여 준다. 국가는 세금을 거두려면 수익성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한다. 시장은 국민 국가가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고 위기를 해결해 주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누를 때만 작동할 수 있다. 정부가 대학 등지에서의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면 이후 민간 기업이 이를 가져다 쓰기도 한다.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대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가 기술 개발에 투자한 덕분이라고 지적한다. 애플과 구글 모두 미국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작은 정부’가 아니다. 사실 공공지출은 1980년대 내내 두드러지게 감소한 적이 없다. 1980년대의 진정한 특징은 국가가 복지를 내팽개치고 자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대기 오염은 인명 피해가 가장 큰 환경 문제로 매년 약 4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하지만 한 최신 보고서를 보면 국제 원조의 1퍼센트만이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반면,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에는 20퍼센트나 지출된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보전에서 손을 떼고 ‘수익성 있는’ 오염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재정을 돌린다.

정치와 경제

신자유주의가 일차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인지 아니면 경제 전략인지를 두고 저술가·활동가들은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둘 다이다.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규제완화,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했다. 정치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데이비드 하비가 ‘반혁명 프로젝트’라고 부른 것으로, 1970년대 파업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보여 준 자신감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마거릿 대처가 사회의 종말, 즉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지원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서의 사회가 사라졌다고 선언한 것은 유명하다. 개인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다.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낙수 효과는 없었지만, 신자유주의 사상은 위에

서 아래로 흘러내렸다. 오늘날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하라고 가르친다.

신자유주의에 관해 쓴 글에서 종종 ‘도덕적 해이’가 언급되는데, 이 개념은 원래 보험 업계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부상당했을 때 당사자의 무책임한 과실을 설명하는 용어였다. 1970년대에 신자유주의자들은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사회보장, 건강보험, 실업급여 같은 복지 제도가 사회에 해롭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부양자녀가정보조 제도가 “선량한 시민의식에 해로운 사회적 병리 현상의 두드러지는 상징”이라고 비난받았고, 1996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주장 때문에 정부가 시장 개입을 멈추지는 않았다. 외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6월에 발간된 OECD 보고서는 규제금융에 엄격한 조건을 붙여, “추가 규제금융이 있을 거라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라고 각국 정부들에 권고했다.

투자 기업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 스콧 마이너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와 재무부의 기업 지원이 “새로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규제금융을 보면서 산업계가 그런 지원에 의존해 철강 공장이나 엔지니어링 공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청년·실업자들이 “도덕”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지원하려고 요구하도록 부추기는 선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를 “탈정치화”하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작은 정부’가 아니다.

사실 공공지출은

1980년대 내내 두드러지게

감소한 적이 없다.

1980년대의 진정한 특징은

국가가 복지를 내팽개치고

자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겠다고 했다. 시장은 날씨처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됐다. 토니 블레어는 2005년 노동당 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화를 멈추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식이면 여름 다음에 꼭 가을이 와야 하는지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07년, 당시 미국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어느 대통령 후보가 당선하는 것이 경제에 가장 좋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린스펀은 이렇게 답했다. “미국에서 정책을 결정할 권력은 대부분 세계 시장의 손에 넘어갔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경제와 정치는 서로 별개의 영역이며 국가의 구실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변형할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 이런 논리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용자들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고, 시장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키웠다. 물론 시장이 국가의 정치적 개입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때는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이윤율을 회복하지 못했다. 저성장과 거둬드는 금융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들이 국가 주도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를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갈등·분열·혼란이, 우리 편에서는 저항의 기회가 생긴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사멸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심대했기 때문에, 자본은 이윤을 보호할 조처를 국가가 취하고 재정을 지출하도록 막대한 압력을 가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실천과 단절하는 징후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의 수호자 구실을 해 온 것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40년 간의 시장 지배가 순순히 무너지도록 할 생각이 없다.

블레이클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모종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탄생이다.” 이런 권위주의적 경향은 상층의 부를 공고히 하려 한다. 최근 쏟아지는 국가 권력 강화, 시민적 자유 후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백래

시 등이 그런 패턴의 일부다.

그러나 이런 권위주의에는 한계가 있다. 자유를 억압하면 종종 저항을 부른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수단에서 칠레까지, 아이티에서 이라크까지 휩쓴 일련의 세계적 반란의 특징은, 억압이 커진 만큼 저항도 커졌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대기업과 기관들은 사회운동을 반대하기보다는 포섭하려 한다. 소프트웨어 대기업 ‘세일즈포스’는 텍사스주에서 가혹한 낙태금지법이 제정되자 직원들을 텍사스에서 다른 주로 전근시켜 주겠다고 나섰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신자유주의가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고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마케팅 기회이기도 했는데 스카이TV 같은 기업들이 인종차별 반대 광고를 자주 내보내는 대신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는 일체 피하도록 해 준다.

우리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은 개혁주의·자유주의 정당들과의 “진보적 동맹”을 정당화하거나,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부상한 대기업에 반발하는) 중소기업과의 동맹까지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언론인 폴 메이슨이 최근 〈가디언〉에 [자유민주당 등 중도 보수 정당들과의 동맹도 열어둬야 한다고] 쓴 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바이든이 버니 샌더스의 ‘반(反)기업’ 공약을 이행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자들은 바이든의 이런 허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는 시장을 저지할 수도, 시장에 맞설 수도 없다는 신화를 산산조각냈다. 정치가 귀환했다.

이제 선택은 정부가 한다. 정부가 은행을 규제하고 민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부가 그 돈을 보건과 교육에, 팬데믹 동안 갑자기 주목받은 필수 노동자들을 위해 쓰도록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적은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다. 주적은 자본주의 자체이고, 국가가 신자유주의적이든 권위주의적이든 감시만능주의든 케인스주의적이든 마찬가지다. 국가의 경제 개입 자체가 진보는 아니다.

좌파의 전략은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며, 체제의 억압과 불평등에 맞서 되도록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운동은 노동계급 대중의 투쟁성을 높이고, 연대와 전투적 노동계급 투쟁의 새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인간과 이윤을 좀 더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국가를 온화하게 만들려는 일부 좌파 프로젝트의 협소한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표정만 좀 더 친근할 뿐인 또 다른 자본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원한다.

출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웹사이트

번역 김동욱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살해한 극우, 무죄 판결 되풀이되는 부정의에 맞서 저항도 계속돼야

소피 스콰이어

지난해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경찰에 항의하던 시위대에 총을 쏘아 두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극우 카일 리튼하우스가 11월 19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화당 내 도널드 트럼프 지지 파벌 주변에 모여든 극도로 폭력적인 파시스트적 세력은 이번 판결을 흑인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좌파를 공격해도 된다는 신호로 여길 것이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데텍 쇼빈이 지난 4월 유죄 판결을 받아 잠깐 변화가 있는 듯하다가 다시 평소의 부정의로 되돌아간 것이다.

브루클린, 시카고, 포틀랜드, 오클랜드, 보스턴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즉각 소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약 300명 규모의 브루클린 시위에 참가한 셀 스테퍼닉은 〈뉴욕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이번 판결이 놀랍지도 않아서 시위에 나온 겁니다.

“더는 놀랍지도 않아요. 지난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조지 플로이드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말이죠.”

사면 와콰드는 이번 판결이, 무기를 들고 다니도록 극우를 더 부추길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이 시민 불복종 행동에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더는 안전하게 시위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완전히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다니 정말 참담합니다. 리튼하우스가 아니라 흑인이나 갈색 인종이었다면 진작에 죽은 몸이었을 겁니다.”

유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는 시위대 약 150명이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광할 놈의 시스템 전체가 유죄다”, “정의 없이 평화 없다”, “살인범을 감옥으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시위대가 교도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는 시위대가 시청에서 연방 정부 건물까지 행진하며 이렇게 외쳤다. “혁명만이 길이다!”

리튼하우스는 2020년 8월 25일 위스콘신주 커노사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조지프 로젠바움과 앤서니 후버를 돌격 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는 이틀 전 백인 경찰관 러스텐 셰스키가 인종차별적 이유로 흑인 제이컵 블레이크에게 총을 쏜 것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이 시위는 미국의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맞선 거대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항쟁 물결의 일부였다.

리튼하우스 재판은 졸속으로 진행됐다. 우파 성향의 판사는 리튼하우스의 “정당방위”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의 기소를 무력화시켰다.

판사 브루스 슈로더는 법정에서 로젠바움과 후버를 치칭할 때 “피해자”,



바이트 정부하에서 극우를 고무하고 체계적 인종차별을 보여 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살해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카일 리튼하우스

심지어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슈뢰더는 피고측이 로젠바움과 후버를 “방화범”, “폭도”, “약탈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허용했다. 슈뢰더는 리튼하우스가 극우 사상을 지지한다는 증거도 기각했다.

커노사에서 살인을 저지르기 전 리튼하우스는 돌격 소총으로 ‘좀도둑들’을 쏜 준비가 됐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트럼프

지난해 말 보석으로 풀려난 리튼하우스는 “화이트 파워” 손짓을 하거나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들과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잡는 모습이 목격됐다.

슈로더는 “좀도둑들을 쏘 버리겠다”는 리튼하우스의 말과 시위대 살해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지난주 법정에서 울린 슈뢰더의 전화벨 소리는 리 그린우드의 ‘미국을 축복하소서’

였다. 도널드 트럼프가 집회에서 사용했던 이 곡은 그의 지지자들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노래다.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계속되고 있을 때 트럼프는 대선 후보 토론에서 ‘프라우드 보이스’에게 “물려서서 대기하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누군가가 ‘안티파’와 좌파들을 처리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

리튼하우스가 시위대를 살해하자 트럼프는 리튼하우스를 옹호했다. 트럼프는 리튼하우스가 “정당방위”를 했다고 언론에다 주장했다.

나중에 유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는 국토안보부 관료들에게 리튼하우스가 “소상공인들을 지키는 데에 힘을 보태려고 소총을 들고 폭동 현장에 갔다”고 분명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마저리 테일러 그린도 리튼하우스를 옹호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리튼하우스를 비난하면서 자신을

남성이라고 밝힌 실명 인증된 트위터 계정들, 논평가들보다 리튼하우스가 훨씬 더 남자답다.”

판결 이후, 플로리다주 공화당 하원 의원이자 트럼프의 협력자인 맷 게이츠는 리튼하우스를 인턴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하원의원 폴 고사는 리튼하우스 채용을 놓고 게이츠와 “팔씨름”을 하겠다고 했다. 고사는 자신이 좌파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살해하는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가 지난주에 징계를 받은 자다.

부정의

리튼하우스 판결은 사법 체계의 부정의와 인종차별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다.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의 조사 결과,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20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차량 최소 139대가 시위대로 돌진해 최소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운전자가 기소된 경우는 절반도 안 되고, 중범죄로 처벌받은 운전자는 4명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공격에 호응해 시위 참가자를 친 운전자를 법적 대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플로리다·아이오와·오�클라호마주에서는 이런 법이 통과됐다.

한편 2020년 2월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조깅을 하던 아마드 아버리를 추격해 총으로 쏘아 죽인 백인 3명에 대한 판결이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다.

그레고리 맥마이클과 트래비스 맥

마이클 부자, 윌리엄 “로디” 브라이언은 중죄 실행 중의 살인, 가중 폭행, 불법 감금 혐의로 재판 중이다.

맥마이클 부자는 아버리가 강도인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아버리가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버리에게 치명탄을 쏜 트래비스 맥마이클은 아버리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산탄총을 움켜쥐었기 때문에 “생사가 달린” 결정을 찰나에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검찰은 트래비스 맥마이클을 심문하며, 지금 맥마이클 부자는 아버지에게 시민체포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논리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경찰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맥마이클은 아버리가 무장하지 않았었고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번 주 피고측 변호사는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앉은 “흑인 목사들이 더는” 재판 방청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피고측 변호사는 평등권 운동가 엘 샤프틴을 법정 밖으로 쫓아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샤프틴이 배심원단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판사는 변호사의 요청을 기각했다.

변화를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게 할 유일한 방법은 미국에서 2600만 명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 모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되살리는 것뿐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81호 / 번역 오선희

11월 19일 뉴욕 리튼하우스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서평 | 《오인된 정체성》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차별에 맞서는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가 효과적인 수단일까?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려면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이라면 신간 《오인된 정체성》(두번 째제)의 출간을 반가워할 것이다.

저자 아사드 하이더는 좌파 매체 〈뷰포인트〉 창립자이자 파키스탄계 미국인이다. 200쪽 분량의 두껍지 않은 책에서 저자는 정체성 정치의 역사와 그 작동 방식에 대해 심사숙고 해서 다루며, 여러 자국과 통찰력을 준다.

저자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인 인종 문제와 관련해 정체성 정치가 보인 한계를 중심으로 다룬다.

오늘날 정체성 정치를 이러저러하게 (심지어 우파 쪽에서) 비판하는 글들이 꽤 있지만, 차별에 굳세게 맞서면서도 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가 돋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체성 정치란 특정 차별을 겪는 당사자들만이 그 차별을 이해할 수 있고, 차별에 맞서는 데 이해관계가 있으며 가장 잘 맞설 수 있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정체성 정치는 차별에 맞서는 사람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저항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파편화의 위험

그러나 저자는 여러 풍부한 사례를 들어서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차이를 뛰어넘은 단결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운동의 힘을 약화시키는지 보여 준다.

예컨대, 미국의 한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백인들이 주도하자, 일단의 흑인 학생들이 분리를 선언하며 학교 당국에 맞선 운동을 약화시켰다.

경찰 폭력에 맞선 투쟁을 백인이 조직 할라치면 흑인이 아닌 사람이 이런 쟁점을 다룰 자격이 있는지 논쟁이 벌어진다.

한 집회에서는 “오로지 흑인만이 마이크를 쥐고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행진의 맨 앞에는 흑인들이, 백인 ‘동조자’들은 맨 마지막에, ‘갈색인’들은 중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공지됐다.

이렇게 차이에 주목하는 정치는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을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벌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책의 강점 중 하나는 저자가 직접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해 온 사람이고, 이 책도 광범하고 전투적인 대중운동 건설에 기여하길 바라며 쓰었다는 점이다.

저자가 지적하듯이, 광범한 대중투쟁 건설이라는 전망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언어를 바꾸는 일이나 개인적 상처를 보상받는 일 등에 집중하게 됐다. 이는 더 한층의 파편화와 분열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예컨대, 저자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점거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일부 학생들은 “점거”(occupy)라는 용어가 식민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대안 용어를 제출하는 데 골몰했다고 한다.



오인된 정체성

— 계급, 인종, 대중운동, 정체성 정치 비판

아사드 하이더 지음 권순욱 옮김. 두번째제. 200쪽. 14,000원

저자는 이것이 정체성 정치에 내재한 문제점을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라는 구조를 비판하지 않으면, 차별받는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 체제 내에서 (상층부의) 인정을 획득하는 것, 개인의 상처에 대한 배상과 포용을 요구하는 것이 운동의 결론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흑인이나 여성이 올라가는 것이 종종 정체성 정치의 결론이 되곤 했다.

흑인 내에서도 엘리트 집단들이 이런 정체성 정치에 기반해 상층부로 올라갔다. 이는 흑인 공동체 내부의 계급 모순을 가렸다.

“[흑인 엘리트들은] 통합된 이해관계를 지닌 단일한 인종 공동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에서 자신과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흑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눌렀다.”(44쪽)

이 모순은 미국에서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폭발했다. “백악관에는 흑인 가족이 있었지만, 흑인 공동체에 대한 경찰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57쪽)

인종과 계급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운동은 이런 흑인 공동체의 계급 모순 속에서 터져 나온 운동이었다.

저자는 인종을 초역사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며, 인종 개념이 노예제와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 개발된 허구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1960~1970년대 흑표범당이나 맬컴 엑스 등이 주창한 혁명적 흑인 해방 운동 조류들을 지지하며 그들이 인종차별과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하나로 보았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결론으로 자본주의와 인종차별에 맞서서 우리 모두 “반란자적 보편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인종이 아니라 계급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조야하게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는 “계급 환원주의”도 비판한다.

하지만 저자는 계급(착취)과 차별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는 “인종과 계급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그 어느 쪽도 정치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저자는 어떤 것이 더

중심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환원주의가 될 것을 경계하는 듯하다.

그런데 서평자가 보기에 계급과 차별의 관계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평자도 계급과 차별을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급은 단지 여러 차별 중 하나가 아니다. 계급은 관계이고 자본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을 가진 착취하는 자와 가지지 못한 착취당하는 자의 계급 관계로 짜여져 있다.

자본주의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이 이런 착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차별을 부추기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차별은 노동계급 내 차별받는 집단만 취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처지를 악화시킨다.

그렇기에 착취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라도 노동계급은 단호하게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차별은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에 차별에 맞서며 단결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면 온갖 차별의 뿌리도 함께 뽑혀나갈 것이다.(이에 대한 설명은 〈노동자 연대〉 363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참조하시오.)

광범한 연대

한편, 신자유주의의 부상에 관한 저자의 설명에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저자는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 정부가 집권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이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 같은 우파들이 득세한 상황에서 교훈을 준다고 지적한다(이 책은 2018년에 쓰였다).

그런데 저자는 영국 마거릿 대처 정부가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 정부였다는 스튜어트 홀의 유명한 규정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대처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기층 노동자들에게도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고 과장하기 쉽다.(대처 시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레프트 21〉 102호 기사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돌아보는 마거릿 대처’를 참고하시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저자가 인용하는 방대한 지식인들(CLR 제임스, 알랭 바디우, 주디스 버틀러 등)과 흑인 급진주의자들에 감탄하면서도, 그 인용문이 워낙 많아 정신이 약간 아득해질 수도 있다. 인용문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생략된 부분이 많아, 저자가 이들의 관점을 얼마나 동의하는지 알기 어려운 난점도 있다.

책의 내용과 별개로, 번역이 다소 매끄럽지 않아서 독해가 쉽지 않다는 상당한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종합하자면, 차별 반대 운동이 광범한 연대를 모아내지 못하는 최근 상황들에 비춰 볼 때 해방을 위한 광범한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이 책의 장점은 매우 분명하다.

양효영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주요 대선 후보들 부동산 공약 비교

윤석열

종부세 폐지, 부자 위한 규제완화, 서민 고통 키울 것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노골적인 친시장·친부자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대표적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종부세만이 아니라 보유세, 양도세 등도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퍼센트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0.5퍼센트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마저 더욱 낮추자고 하니 그가 얼마나 부자들의 이익에 충실한지 알 수 있다.

임대차 3법도 개악하겠다고 한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인상률을 5퍼센트 이내로 제한한 법이다.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책마저 후퇴시키려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5년간 주택 25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중 대부분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민간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대장동 사태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부동산 개발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게 드러났는데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들의 이재명 비방 공세가 역겨운 위선인 이유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태로 이재명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도 민간 사업자들의 이윤을 제한하는 법안들의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공공 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 제한, 개발 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등.

윤석열은 청년층 표심을 잡으려고 청년월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고는 분양가의 20퍼센트를 먼저 내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장기 저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5년 거주 후에 시세 차익의 30퍼센트를 국가에 반납하고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도 비슷한 취지의 '누구나집' 사업을 제시했다. 이미 실행된 바 있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주택'이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뉴스테이와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이 사업들은 원리금을 월세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26~38제곱미터의 소형 주택도 월세가 98만 원(보증금 7000만 원)이나 됐다.

게다가 이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짜여진 정책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노동자·서민의 주거 안정 대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심상정

종부세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서민 주거 보호 강화

정의당의 대선 후보 심상정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87년 대중 투쟁의 여파 속에 1989년 제정됐지만 우파들의 반발을 받으며 1998년 폐지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의 20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44퍼센트에 이르는 집 없는 가구 중 절반을 "질 좋은 그린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이 임대차 3법을 개악하겠다는 것과 반대로, 전월세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5퍼센트 상한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모두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다.

최저주거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빈곤가구가 200만 가구가 넘는 상황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노동자들의 주거난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이런 공약이 실현되려면 종부세에도 호들갑 떨는 우파·부유층의 반발을 이겨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 투쟁을 일으키는 일에 크게 일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선영

이재명

국토보유세로 부자 증세, 기본주택 100만 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의 종부세 폐지론을 비판하며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를 통해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퍼센트로 올리겠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이제까지 토지를 주택용·상업용·공장용 등으로 나눠서 과세해 오던 것을 바꿔 0.3~2퍼센트의 세율로 통합해서 과세한다. 공장·골프장 같은 종부세 비과세 토지, 최고세율이 0.7퍼센트에 불과한 사업용 토지 등 기업과 부유층이 소유한 토지의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포스코의 경우 세금이 29억 원에서 365억 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국토보유세로 통합이 된다.

국토보유세로 거둬 들일 세금은 33~34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중 지방정부에 교부되던 종부세 분을 제외한 30조 원은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배분하겠다는 게 이재명의 계획



이다.(연간 1인당 60만 원가량) 토지 보유세를 늘려 부자와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것은 마땅히 지지할 방안이다. 벌써부터 우파들은 국토보유세가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공격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1000원짜리 껌 하나를 사도 소비세를 10퍼센트씩 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땅에 감세 혜택이 준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재명은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공약도 내놔다. 이제까지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40제곱미터 이하로 가족이 거주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재명은 기본주택을 통해 33평까지 공급해 어지간한 노동계급 가족이 살 만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이 시장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것에 비하면 이재명이 기본주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나은 방안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기본주택은 월 임대료가 60만 원이나 되는데, 보통의 노동계급 가구가 부담하기에 적지 않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의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며 기본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무엇보다 이재명의 계획대로 기본주택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10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다.

물론 이 정도의 정책도 시행이 되려면 우파들과 기업주들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최근 민주당의 양도세 인하 추진은 묵인하고 있다. 이재명이 민주당 주류와 타협할수록 개혁 염원 대중의 기대가 수그러들며 정책 골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젠더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12월 2일(목) 오후 8시

발제 정진희 <노동자연대> 기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저자

참가신청 bit.ly/meeting1202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젠더 갈등 논란이 수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을 공략하려고 밀려들면서 이 논란이 증폭됐죠. 청년들은 익힌 경제 상황과 불평등에 불만이 크고 사회가 공경하지 않아요. 이런 불만과 열의가 어떻게 젠더 갈등으로 표출된 것일까요? 20대 남성여 보수화해서? 문제인! 불공정한 '전여성' 정책을 펴서? 남녀 대립이 부추긴 상황! 대해 일부 페미니즘과 좌파가 돌아볼 줄은 없을까요?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문의 02-2271-2295, 010-4909-1026(문자 가능)

참가신청 QR코드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youtube.com/노동자연대TV